

기업을 바꾸는 변화의 시작, ESG 경영	
16차시	다급해진 ESG 정보 공시

1. 다급해진 'ESG 정보 공시' 어디까지 왔나?

정보 공시의 기본은 '데이터'다. 평가는 계량화할 때 신뢰성이 높다. 정량화할 때 비교하기가 용이하다. 숫자로 표기할 때 얼마나 노력했는지 이해하기가 쉽다. 기업운영 시스템에서 나오는 각종 데이터를 어떻게 정량화할 것인지 표준 모델화하는 것이 공시의 기본이라 할 수 있다. 재무적 지표는 데이터 자체가 계량이다. 문제될 것이 없다. ESG에서 처음 다루고 있는 비재무적 지표의 정량화가 관건이다. 목표가 명확하고 구체적이라면 측정 또한 수치로 표기하기가 용이하다. '환경 보호에 만전을 기한다'와 같은 포괄적이며 두루뭉술한 표현은 데이터로 표기한다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공시는 단순히 기업의 건강상태를 알리는 목적도 있지만, 건강함을 홍보하려는 의도도 다분하다. 그러므로 기업 운영에서 추출되는 다양한 데이터를 모듈화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그 데이터가 어떤 의미인지 공시에 담아내는 것도 기업의 역량이다. 아직은 공시가 기업의 자율성에 의존하고 있다. 정량화, 객관화, 가시성 등에 대한 표준화는 내년도 시행을 앞두고 아직 논의 중에 있다. 환경과 사회 등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진화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는 말 그대로 기하급수적 변화이므로 'ESG 기준', 'ESG 평가', 'ESG 공시' 등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가. 왜 'ESG 정보 공시'를 서두를까?

만약 정보 공시가 의무 대상이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 원가 상승이 불보듯 뻔한 일인데 굳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할 필요가 있을까? 지금도 잘되고 있는데 주주를 어렵게 설득하면서까지 무거운 짐을 짊어질 이유가 있을까? 대부분 기업이 하려고 시도 또는 한다는 모양새는 갖추겠지만 실효성 있는 실천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걱정인 것이다. 'ESG 정보공시'가 의무화될 수 있도록 2021년도부터 격론을 벌이기 시작했다. 근원지는 역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이다.

유럽연합은 2022년도 말까지 공시 방법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고 표준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도 의견 수렴일인 2022년 7월 29일 이전에 한국의 특수성을 반영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2023년도에는 그 결과물을 볼 수 있으리라 전망해 본다. 처음으로 공시가 의무화된 산업은 '금융산업'이다. '지속가능금융공시규정(SFDR, 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2021년 3월부터 발효됐다. 유럽연합 역내 금융기관의 투자 및 상품 관련 지속가능성 정보의 공시를 의무화한 것이다. 공개된 정보가 'ESG 금융' 목적에 부합한지와 투자받은 기업의 '그린 워싱'은 없는 지 등에 대해 판단 근거로 활용된다.

SFDR의 논의와 발효는 다른 국가의 격론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2021년 4월에는 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기업을 대상으로 비재무정보보고지침(NFRD)을 개정한 '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을 발효했다. 이에 질세라 미국도 2021년 5월 증권거래위원회가 'ESG 공시체계'를 화두로 던졌다. 2021년 6월 미국 하원이 화답했다. 'ESG 공시'를 포함한 11개 세부 기준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도 'ESG 정보 공시'에 관한 법률적 토대를 마련했다. 또 하나 상장기업들이 기후변화 공시 의무화 초안을 2022년 3월에 발표했고,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 다음 최종적인 의무를 강화한 공시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유럽도 미국도 기후변화에 대한 부분만큼은 양보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에 있어서 직접적 요인은 당연하고 간접적 요인까지 아우른다. 아울러 '공급망 ESG 관리'도 초안에 포함되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 협력업체이거나 협력업체 중 온실가스 배출량이 큰 경우에는 공급망 전 과정의 온실가스를 공시 내용에 반영해야 한다는 강력한 조치를 담고 있다.

아직은 초기단계이다. 2023년도 시행을 앞두고 각국의 이익을 앞세워 격론을 벌이고 있다. 다만, 지구 온난화에 대응한다는 대의명분에서는 큰 의견이 없다. 유럽연합과 미국은 'ESG'에 관해서는 한 발 앞선 것이 분명하다. 불확실성과 자국 우선주의가 그 어느 때보다 팽배해지는 국제적 정세를 고려할 때, 선진국이 추진하는 'ESG 정보 공시'의 파고는 만만치 않을 것이다. 문제는 관리 방법이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사람 중심'이 아닌 '시스템 중심'이어야 한다. '데이터'의 양과 질적인 부분을 감안한다면 '사람 중심'의 공시 관리는 불가능에 가깝다. '인적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디지털의 힘을 활용해야 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ESG는 피하고 싶다고 피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다.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부분 기업이 포함되기에 더욱 긴장해야 한다.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처음으로 개최된 G20 세계정상회의에 'ESG'가 논의 주제로 상정되었다. G20 각국 정상들은 ESG 정보공시를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 G20 세계정상회의, 세계경제포럼(WEF) 등 글로벌 리딩국가의 정상들이 한 자리에 모이면 ESG는 빠짐없이 토론 주제로 상정될 뿐 아니라 빠르게 추진하는데에도 동의하고 있다. 그 결실이 2023년 대기업이 우선 적용된다. 2024년도에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여러 번 강조하지만 돌아갈 수도 피할 수도 없는 막다른 골목임에 틀림없다. 스스로 역량을 키워 이 난국을 극복하는 수 밖에 없다. 어린아이 떼쓰듯 정부의 지원만 바랄 수 없다. 반드시 지켜야 하느냐와 같은 볼멘소리도 들어 줄 사람이 없다. 이제는 적극적이며 정면으로 맞서서 헤쳐 나가는 것이 능사이다.

나. ESG 공시제도, 6가지 점검 포인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은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몇 가지 공시기준을 갖추었다. 대부분 계량화된 자료이다. 정기공시, 주요사항보고, 발행공시, 지분공시, 외부감사 관련 등 상당 부분 측정 가능한 영역이다. 측정 가능하다는 것은 객관성을 부여받기에 충분하다. 작위적 해석이나 평가를 최소화함으로써 불필요한 논쟁을 없애기 위함이다.

ESG 정보 공시는 대부분 비재무적 요소이다. 전자공시시스템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해관계자가 이해하고 수용하는데에도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정량적이며 수치화된 재무적 정보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다. 대부분 단순하기에 맞느냐 틀리느냐에 대한 논쟁이 그렇게 많이 발생할 요소도 없다. 다만,

원인을 치유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있어서 사안별로 논쟁이 발생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재무적 정보와 차이를 보이는 ESG 정보 공시도 비재무정보에 대해 공시 기준이 필요하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열띤 토론을 진행하고 있지만, 일정한 작성 기준과 정보의 공개 범위, 정보 공개 채널 등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최대공약수를 찾아 공통된 기준을 만드는 것이 'ESG 정보공시제도'이다.

공시는 작위적 해석이 아니라 일정한 기준에 의해 공유함으로써 객관성을 부여받는다. ESG 공시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ESG 공시는 투자자와 소비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만큼 더욱 신경쓰이는 부분이다. 세계 굴지의 자산운용사, 연금운용사가 석탄산업, 아동노동 착취 등의 산업에는 투자하지 않겠다고 공공연하게 선언했다. ESG는 개인전이 아니라 단체전이라 했다. 나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치사슬에 연계된 기업 전체가 공동 대응해야 한다. 그렇기에 'ESG 정보 공시'에 갑론을박이 뜨겁다.

우리나라는 'ESG 정보공시' 준비가 느리다. 금융위원회는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해외 사례 분석하면 도입 여부를 고민 중에 있다고 금융위원장이 2022년 4월 한 포럼에서 밝혔다. ESG가 유행이 아니라는 점에 금융위원회도 공감하며, ESG 공시 의무화를 거스르기 힘든 대세라는 점도 인정했다. 아울러, 국내 기업들이 사업보고서에 ESG 공시를 반영하고, 허위 공시 등 위반사례가 적발시 법률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도 인정했다. 중소기업이 갖고 있는 애로사항도 파악하고 있으며, 현 단계는 '인증 문제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고민하는 단계'라고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설명했다.

ESG 정보 공시는 '사람 중심'이 아닌 '시스템 중심'으로 관리할 필요성을 설명했고, 디지털의 힘을 활용해야 한다고 수단도 언급했다. 국내 ESG 공시제도 설계와 관련해 고려해야 할 내용을 '한경ESG(Vol.10, 2022년 4월)'의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ESG 공시제도, 6가지 점검 포인트)의 발표 자료의 주제를 기반으로 종합검진 결과와 비유했다.

첫째, '공시 범위'이다. 어디까지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할 것인가가 고민이다. 분명 ESG 관리는 비용이 수반된다.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라는 경제원칙에 따르지 않더라도 효율성보다 비용이 더 크다면 그 제도 유지는 쉽지 않다. ESG 결과는 이해관계자의 관심사항이 틀림없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마땅하다. 특히, 기후위기와 인권 등에 관한 자료는 다다익선(多多益善)일 수도 있다. 다만, 측정 가능한 범위를 넘어설 경우 비용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할 수 있기에 주저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예측 가능하고 지속적인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주주 입장에서는 과도한 비용을 투입하면서까지 ESG 측정에 반기를 들 수도 있다.

종합검진에는 개인정보에 준하는 내용에서부터 의료 진단내용까지 다양한 정보가 있다. 종합검진 결과표 100%를 공시해야 한다면 반발은 상당할 것이다. 개인별로 밝히고 싶지 않은 사적인 영역이 분명히 있다. 누구는 체중에 관한 부분일 수도 있고, 어떤 이는 체질량지수(BMI)일 수도 있다. 이처럼 예민한 영역이기도 하지만 반드시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까지 공유하려고 한다면 득보다 실이 더 많을 것이다.

반사회적 흉악범도 인권보호 차원에서 개인정보 공개를 심의위원회를 거치는 등 심사숙고한다. 하물며 기업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무조건 죄악시하는 것도 잘못됐다. 분명 보호해야 할 영역은 존재한다. 존중할 부분은 인정하고, ESG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범주에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것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단계별로 ESG 정보를 공시하면 어떨까 싶다. 공시 초기에는 이해관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 위주인 중요한 정보만 공시하는 것이다. 광범위한 정보가 모두 유용하다는 것을 보장할 수 없을 바에는 확실하게 필요성이 인정되는 부분만 추려서 공유한다. 공시 자료 확인하는 과정에서 더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추가 공시를 통해 범위를 단계별로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정보 공시의 의무화'이다. 가장 효율적인 것은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미 설명한 것처럼, 자율성을 부여했을 때 과연 아픈 곳을 알리면서 치유하려고 하는 기업이 얼마나 될까 싶다. 부정적으로 접근할 것은 아니지만 공개할 경우에는 기업에 유리한 정보가 우선시 된다는 것이 일반론이다. '그린 워싱' 등 이해관계자 기만행위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유럽연합이 행정제재나 민사책임을 부여한 법률적 초안도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한 공여지책이라 본다.

현재 기업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이사회, 주주총회,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협의회,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에 공유하는 과정이 정보 공시제도이다. 이해관계자들이 미래지향적으로 판단해서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잘못된 것은 바로 잡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무조건 부정적으로 접근한다면 기업은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그럴 경우 최소한의 범주에서 공개하려고 한다. 의무가 아니라면 밝히기를 꺼릴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ESG를 통한 기후위기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요원할 수 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지만 'ESG 공시 의무화'에 매몰되어 일정한 기준 마련을 등한시하면 기업에게 부과된 의무가 빛을 발할 것이다. '그린 워싱(green washing)'은 막아야 한다. 보여주기식 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 현재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각양각색이다. 작성하는 기업마다 적용기준이나 형식이 달라 일목요연하게 비교하기도 어렵고 얼마나 잘하고 있는 지, 어디가 부족한지를 객관화하기에는 다소 부적절하다. 이러한 현상을 예방하려면 공시 의무화 더불어 일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셋째, 'ESG 정보 공시'가 담길 보고서 종류이다. 현재 거래되고 있는 보고서는 두 종류이다. '사업보고서'와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이다. '사업보고서(Divisional Reporting)'는 자본시장법에 근간을 두고 있다. 사업의 현황과 실태를 기재한 문서이다. 회사명·주소 등과 같은 회사 현황, 사업 내용, 재무 사항, 감사인의 감사의견, 관계회사 현황, 주식 내용, 임직원 현황, 이해관계자와 거래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만약 사업보고서에 'ESG 정보 공시'를 반영한다면 근간인 자본시장법의 저촉을 받는다. 공시 내용 중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과 형사 책임으로 확산될 수 있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Sustainable Management Reporting)’는 UN이 주창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경영에 접목하고 그 결과를 기재한 문서이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규제는 거래소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위법한 사실 또는 허위 기재한 사실이 밝혀지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어 행정 제재와 같은 불이익을 받을 뿐 아니라, 자본시장에서 주가 하락 등 추가적 금전적 피해도 입을 수 있다. ‘불성실공시’란 상장·등록법인에 부과된 이해관계자에게 재무내용 등 권리행사나 투자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알리도록 의무화한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게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정준혁 교수는 ‘ESG 정보 공시’를 두 종류의 보고서에 분산할 것을 권장한다. 핵심 ESG 정보는 보다 강력한 법률적 제재를 갖는 ‘사업보고서’에 포함하는 것이다. 기후위기 대응 관련 ESG 지표에 대한 실천사항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탄소배출량, 미세먼지 발생량 등이다.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은 사업보고서에 다소 자율성 부과해도 무방한 것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반영하는 방안이다.

넷째, ‘글로벌 표준화된 기준’이 무엇인가이다. ESG 정보 공시와 관련된 글로벌 기준은 다양하다. 국가별로 다르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별 위원회별로도 차이가 있다. 자료에 의하면 ‘글로벌 리포팅 이니셔티브(GRI, Global Reporting Initiative), ‘지속가능성회계기준위원회(SASB, Sustainability Accountin Standards Board),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태스크포스(TCFD,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가 활용되어 왔다. 최근에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C,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Committee)’를 중심으로 흩어져 있던 공시기준이 통합하는 일련의 행위를 진행하고 있다.

판정 기준이 상이할 때 당사자는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ESG도 동일한 현상이 발생한다. 자국 또는 자사에 유리한 공시 기준에 맞추려 한다. 위원회별로 선택한 기준은 자신의 위원회가 추구하는 목적과 특성에 부합하도록 선정한 지표이기에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거리감이 있다.

아직 정확한 기준이 없다. 자국의 기업을 보호하고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금융위원회 등 우리나라 공시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준비하고 있는 초안이 글로벌 기준과 어느 정도 정합성을 가지고 있는 지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 아울러, 유럽연합 내에서도 각국이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목소리를 내듯이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부득이한 조항에 대해서는 불가항력적인 부분을 설명함과 동시에 대안을 제시하는 적극적인 행동을 보일 때이다. 앉아서 글로벌 기준에 수동적으로 대응한다면 지키지 못할 조항이 많아질 수 있을 뿐 아니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극’에 대한 부분이다. 정보가 많고 준비가 잘 진행되고 있는 대기업과, 여러 면에서 열악한 상황에 처한 중소기업을 동일한 잣대로 바라본다면 시작하기 전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 된다.

‘공급망 ESG 관리’뿐 아니라 중견·중소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대기업과 동일한 수준, 동일한 지표로 평가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유럽연합에서도 적용 시기를

달리하려고 한다. 대기업과 고위험산업군을 우선 적용대상으로 한다. 그 이외 기업은 1~2년 유예기간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ESG 평가지표도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을 별도 적용안을 만들었다. 획일적이면서 동질화한다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상황에 맞도록 설계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뿐이다.

마지막으로 'ESG 정보의 중대성(materiality)'이다. ESG 정보의 중대성 여부 판단은 이해관계자마다 다를 수 있다. 주주는 재무적 요소를 더 중요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판단으로 중대성을 바라보는 관점은 두 가지이다. 자료에 의하면 하나는 ESG 정보가 기업의 주식가치 등 재무적 요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상 중요 정보가 아니라는 견해이다.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이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하고 있다. ISSB는 'ESG 정보의 중대성'에 대해 '일반 목적 재무보고 주요 이용자(투자자)의 투자 의사결정에 필요한 재무정보 제공이라는 맥락에서 바라봤다.

또 하나는 재무적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지와 관계없이 투자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한 정보라면 중요 정보 범주에 해당한다는 견해이다. 한가지 더 추가한다면 유럽연합(EU)의 '이중 중대성(double materiality)'이다. 다시 말하면 재무적으로 중요한 정보가 있고, 또 환경과 사회 측면에서 중요한 정보가 있다면 모두 중요 정보에 해당하는 견해이다.

ESG 정보의 중요성 여부가 왜 문제화되는지는 적용 법률이 다르기 때문이다. 자본시장법의 미공개 중요정보이용행위에 해당될 수도 있고, 증권신고서 등에 중요 사항에 대한 허위 기재로 배상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하나 더 추가한다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설명의무 위반이 될 수도 있다. 적용 법률이 다르다는 것은 이해관계자뿐 아니라 위반할 경우 제재 수준이 달라진다. ESG기 지향하는 목적과 취지를 잘 고려해서 ESG 정보의 중요성 여부를 지금부터라도 본격적으로 논의해 봐야 한다.

다.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ESG 공시' 초안

2022년 3월 31일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는 두 가지 공시 초안을 발표했다. 'IFRS (국제회계기준,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S1 일반 요구사항', 'IFRS S2 기후 관련 공시'이다.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시협의체(TCFD,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의 권고안에 따라 지배구조,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 관련 정보 공시에 중점을 뒀다. ISSB는 공개 초안에 대해 2022. 7월 29일까지 전 세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2022년말 위 2개 기준에 대한 최종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도 7월 29일까지 의견을 제출했다. 또한, ISSB는 생물다양성·물 등 다른 환경분야와 사회·지배구조 분야도 순차적으로 기준을 제정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ISSB의 활동 반경과 영향력을 고려할 때, ISSB의 공시기준은 글로벌 시장에서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ESG 공시기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금융위원회는 밝혔다.

ISSB가 발표한 'ESG 공시' 초안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내용 4가지에 대해 살펴보겠다.

첫째, 'ESG 정보 공시의 중대성(materiality)'이다. ISSB 공시기준은 기업이 지속 가능성 관련

있는 재무정보를 공시토록 지원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그 이유는 투자자가 기업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지속 가능성 관련 재무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기 때문이다. 결국 ISSB는 일반 목적의 재무 보고에 대한 주요 이용자(투자자)의 투자 의사결정에 필요한 재무정보 제공이라는 맥락에서 중요성을 바라봤다.

지속 가능성 관련 재무정보와 재무제표 정보 상호간 연계성을 공시에 포함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보면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 수준이 높은 생산시설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생산시설 폐쇄는 여러 면에서 영향을 미친다. 감가상각에 관한 내용연수 변경과 손상차손 인식 등 재무적 정보가 발생한다. 생산라인에 발생한 매출액이 감소하고 수익도 하락함으로써 주주에 손실을 미칠 수 있다. 생산라인에 속해 있던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게 되고, 그 영향은 기업이 속해 있는 지역의 경제까지 파급된다. 즉, 생산라인 폐쇄라는 재무정보와 그것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의 상호 관계성을 'ESG 정보 공시'에 담아야 한다는 것이 공시 초안이다.

둘째, '공급망 ESG 관리'이다. 기업의 가치사슬(value chain)에 연계된 협력사까지 포함한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 공시 요구가 초안에 담겨졌다. '기업의 사업 모형과 기업이 운영되는 외부환경과 관련한 모든 활동, 자원 및 관계'로 가치사슬에 대한 정의다. 유럽연합(EU)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보다 광범위할 수도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1차 협력업체까지는 관리 가능하다. 유럽연합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에서 지향하는 것을 고려해도 조금 더 신경을 쓴다면 2차 협력업체까지 가능할 수도 있다. 3차 협력업체는 정말 어렵다. 산업계의 판도를 바꿔야 할지도 모른다.

셋째, '온실가스 배출량 총량 및 배출량 집약도 공시'이다. 공개 초안에는 산업 및 사업모형에 구애받지 않는다. 기업이 스코프(scope) 1·2·3 온실가스 배출 총량 및 배출량 집약도를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두 번째 '공급망 ESG 관리'와 연결하면 엄청난 위력이다. K-ESG에서 중견·중소기업은 스코프3(scope3)은 제외되었다. 만약 초안대로 연말에 발표된다면 K-ESG 평가지표를 수정해야 할지도 모른다. 또 하나의 위협적인 것은 연결실체(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정보와 별도로 관계 기업과 공동기업 등의 온실가스 배출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일반 요구사항 공개 초안에는 공시 정보의 검증 가능성(verifiability)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에 기후 관련 분야는 온실가스 공시 검증에 대한 별도 요구사항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산업전반 지표에 포함되는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 전환 위험과 물리적 위험에 취약한 활동 또는 자산의 금액과 비율, 기후관련 기회에 부합하는 활동이나 자산 금액과 비율, 기후 관련 사항과 관련된 경영진 보수 비율 등이다.

마지막으로 '산업전반 지표와 함께 SASB 기준을 활용한 산업기반 지표'이다. 먼저 산업기반 공시를 보면, 공시 주제는 사업별 기후관련 위험과 기회와 관련된 내용이다. 각 공시 주제와 연관된 지표들이 도출되어 있다. 간접적 공시를 통해 직접 연관된 산업이나 기업의 압박수위는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본다. 금융산업은 대기업·중소기업을 포함한 거래 고객의 탄소배출량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이 공시 결과는 중소기업에 포함한 탄소배출 기업은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시행이 불과 몇 달 안 남았다. 2023년도부터 가동될 것이다.

공시 기준은 진화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지속가능성 공시를 위한 자본시장 기준과 다중 이해관계자 기준을 연결하려는 ISSB와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국제기구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간 협업진행 상황도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관심을 갖고 주의깊게 지켜봐야 할 것이다.

라. ISSB 'ESG 공시 초안'에 대한 우리나라 대응

ISSB가 2022년 3월 31일 두 개의 공시초안을 발표했다. 일반과 기후분야였다. 이해관계자의견 수렴은 2022년 7월 29일까지였고 금융위원회는 2022년 7월 27일에 ISSB의 공시기준에대한 한국측 의견서를 제출한다고 발표했다. 금융위원회 발표자료를 인용하여 두 개의 공시초안에 대한 항목별 우리나라 의견과 그 이유를 알아 본다.

1) 핵심주제별 한국의견 요약

공개초안 주요 내용	한국측 검토의견
<IFRS S1 일반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제표 등에 미치는 현재·예상효과) 현재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양적 정보로 공시하고, 사업모델에 미치는 단기·중기·장기의 영향 정보 공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현가능성, 기업 부담, 정보의 신뢰성 측면에서 양적 정보 산출의 우려 존재 → 기업에 충분한 준비시간 부여 및 구체적인 지침·사례 제시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고기업) 재무제표와 동일하게 연결실체 기준으로 보고 - 가치사슬 전반과 관련한 중요한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공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중속기업·사업장까지 통합 관리하여 정보를 공시하는 것은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 → 탄력적 적용 필요 - 가치사슬의 범위를 일정한 수준으로 축소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고빈도) 재무제표와 동시에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은 재무제표(3월말)와 지속가능경영보고서(통상 7월 이후)의 공시시기가 다른 상황임을 설명하고, 충분한 준비시간이 필요함을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의 위치) 재무제표와 동일한 체계 (일반목적재무보고)하에 보고 * 한국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를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의 경우 사업보고서에 지속가능성 공시 추가 시 법령 개정이 필요하며 기업의 법적 부담(예:소송 위험)도 증가할 우려 → 기업이 일반목적재무보고 또는 별도 서식 중 선택할 수 있는 방안 제안
<IFRS S2 기후관련 공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전반 지표) 산업을 불문하고 모든 기업은 Scope 3* 배출량을 공시 * 기업의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간접적인 배출량 (예: 협력사의 배출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용-효익간 균형을 고려, Scope 3 공시는 해당 정보가 중요한 특정 산업에서만 요구하는 방안 제안 - 중소기업의 경우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 또한 고려할 필요
<IFRS S1 & S2 공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일) 미정 * 추후 최종 기준 발표 시 결정할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의 공시 시스템 구축 등 준비, 국가별 공시환경 정비 등 충분한 준비기간 필요

2) 핵심 주제별 주요 내용

(가) IFRS S1 일반 요구사항(General Requirement)

첫째, '중요성 판단 (Materiality judgment)'이다. 질적 정보 위주로 구성된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의 경우 재무정보와 달리 양적 판단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지침)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가능성은 낮지만 영향력이 큰 결과를 갖는 정보(문단 57)'의 판단방법, 상황·가정의 변화 등으로 중요성 재평가 시 최초 평가와 비교하여 추가로 고려할 사항이 있다.

둘째, '재무제표·사업모델에 미치는 현재·예상효과 공시(Impact on current financial statements / Anticipated effects on business model)' 부분이다. 지속가능성 요인으로 인한 재무제표에의 금액적 영향을 별도로 산출하는 것의 실현 가능성 및 실무적 부담에 대한 우려가 현재 효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자산의 손상차손 중 지속가능성 위험에 기인한 부분과 같은 것이다. 예상 효과로는 미래 예측은 다양한 가정·투입변수에 영향을 받으므로, 중장기 정보는 질적 정보가 더 유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에 충분한 준비시간 부여 및 구체적인 지침·사례 제시가 필요하다.

셋째, '보고기업(Reporting entity)'이다. 보고기업 단위를 IFRS 회계기준과 동일하게 연결실체 기준으로 하는 것은 재무제표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이용자가 정보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으나, 해외에 종속기업·사업장이 있는 기업의 경우 물리적인 거리 및 국가별 규제 차이로 이들과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정보를 공시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다. 최초 적용 시 유예기간을 두어 단계적으로 적용하거나, 국가별로 탄력적 적용이 가능토록 예외 규정을 두는 방안을 제안한다. 정보의 범위는 가치사슬의 정의가 폭넓어 다루어야 하는 정보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가치사슬 내 협력사에 포함되는 국내 중소기업들의 경우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가치사슬의 경계를 일정한 범위(공급망 수준)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넷째, '보고 빈도(Frequency of reporting)'이다. 한국의 경우 재무제표(3월말)와 지속가능경영보고서(통상 7월 이후)의 공시 시기가 다르고, 온실가스 배출량 인증(환경부)도 4월 이후에 이루어지고 있어, 기업의 시스템 구축 및 관련 제도 개선 등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므로, 동시 보고 대신 '일정기간 내 보고'로 기준을 완화하고, 국가별 자체 정책을 통해 동시 보고를 유도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특히, 일부 지표(예: 금융회사의 기업대출로 인한 배출량)의 경우 대상 기업의 재결산이 완료된 후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므로 재무제표와 동시에 보고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다섯째, '정보의 위치(Location of information)'이다. 이용자 입장에서 재무정보와 지속가능성 정보를 함께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용하나, 한국의 경우 일반목적재무보고(재무제표 공시)가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 추가 시 법령 개정이 필요하며 기업의 과중한 소송 위험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기업이 일반목적 재무보고 또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와 같은 것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나) IFRS S2 기후 관련 공시(Climate-related Disclosure)

첫째, '기후 회복력(Climate resilience)'이다. 기업 입장에서 시나리오 분석을 어느 수준까지 수행해야 하는지 불명확하므로, 수행방법에 대한 보다 상세한 지침, 예시 제공이 필요하다. 공시 사례 제시는 기업들이 틀에 박힌 문구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측면에서도 유용하다. 기업의 실무적 부담(내부 시스템 수립 또는 외부 기관 의뢰로 인한 비용) 완화를 위한 추가적인 지침, 즉 외부평가기관을 활용·관리하는 방법과 같은 것을 제시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산업전반 지표(Cross-industry requirements) : Scope3 배출량'이다. Scope3 배출량은 공급망, 판매된 제품의 사용·폐기처리 등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간접적인 배출량이다. 산업을 불문하고 모든 기업에 Scope 3 배출량을 공시토록 하는 것은 상당한 기업 부담이 발생하므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내용이다. 비용과 효익간 균형을 고려하여, Scope 3 공시는 탄소 고배출군 산업에 대해서만 요구하는 등 '산업별(industry-based) 접근법'을 제안한다. 특히,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산업기반 지표(Industry-specific requirements)-금융업 : 금융자산 포트폴리오 배출량'이다. 금융 배출량(financed emissions)은 투자대상 회사에서 발생한 배출량 중 금융기관의 대출·투자 등으로 인해 발생한 배출량(금융업 분야의 Scope3 배출량)을 말한다. 단일의 최적 방법론이 부재한 상황이므로, 정보의 유용성 및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보다 상세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상세한 정보에는 정보 수집부터 최종 산출까지 전반적인 과정에서 사용된 가정, 투입변수, 변수 수준 등을 포함한다.

(다) 시행일 관련 (IFRS S1& S2 공통)

기업의 공시를 위한 시스템 구축 등 준비 및 국가별 공시환경의 정비가 필요하므로, 이를 위한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시스템 구축에는 공시시스템 및 통합적인 위험관리 시스템 구축, 연결기준의 정보 산출을 위한 프로세스 구축, 공시 정보 대한 관리체계 구축(공급망에 있는 중소기업의 참여 등), 지배구조 개선(이사의 역량 강화 등)이 해당된다. 국가별 공시환경 정비는 관련 법령 개정, 배출량 인증 등 관련 제도 운영 개선이 수반되어야 한다.